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1. 13.(목)	담당부서	조선해양플랜트과
담당과장	조선해양플랜트과 권혜진 (044-203-4330)	담 당 자	박주현 서기관 (044-203-4331)
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심규진 (044-215-2750)		이태윤 사무관 (044-215-2752)
	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양서진 (02-2100-7684)		임주현 사무관 (02-2100-7696)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고영호 (02-2100-2920)		김경호 사무관 (02-2100-2921)
	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2실 김수야 (02-787-3951)		배정민 팀장 (02-787-3983)
	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 모창희 (02-3779-6020)		안상선 팀장 (02-3779-6050)

EU의 대우조선해양-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결과 및 평가

□ **'19.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**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하여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**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**하고 경쟁당국의 **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왔음**

○ **정부도 당시**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, 과당경쟁 해소 등에 **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했음

○ **심사를 완료한 중국·싱가포르·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동 기업결합을 승인**하였던 만큼, **이와 상반된 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**함

* 중국('20.12.21), 싱가포르('20.8.25), 카자흐스탄('19.10.25)은 무조건부로 승인 완료

□ 다만, **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'19년 당시보다 개선**되어 EU의 불승인 결정이 **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**으로 판단함

○ **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**에는 '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**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**한 상황이었으나, **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**을 보임

▪ ① **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**되었고,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**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**

* 세계 발주(천만CGT): ('15)4.2 ('16)1.4 ('17)3.0 ('18)3.6 ('19)3.1 ('20)2.4 ('21)4.7

② **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**으로 **생산능력이 조정**됨에 따라 **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**

* 세계 건조능력(천만CGT): ('10~'12)6.6 → ('21)4.0 [초호황기('10~'12년) 대비 △38%]

③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**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,**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**고부가가치·친환경 선박**의 수주 확대

* 한국 수주점유율(%): ('15)26 ('16)16 ('17)26 ('18)38 ('19)31 ('20)34 ('21)37

□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-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되었으나, **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**와 **대우조선 정상화**를 **흔들림 없이 추진**해 나가겠음

○ **정부는** 핵심기술·기자재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전환,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, 상생·발전 생태계 구축 등 **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**하겠음

▪ (기술·기자재 중심 산업전환) 설계·엔지니어링 역량강화, 전공정 디지털 전환, 친환경·스마트 기자재 산업 육성

▪ (생산인력 수급관리) 생산기술 인력양성 규모 확대(年 2.7천명→3천명) 및 훈련수당(月 40만원) 지급 등

▪ (생태계 구축) 공동 R&D 플랫폼을 기자재社까지 확대, 조선사 기술회의체 설치('22.4월) 등

○ **대우조선 채권단**은 **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·조업**할 수 있도록 RG(선수금보증) 등 **기존 금융지원***을 **'22년 말까지 이미 연장**했음

* 한도대출(2.9조, ~23년), 대출 상환유예(1.8조), RG(年 35억불), 신용장(年 12억불), 영구채 이자율(1%) 등

○ **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**를 위해서는 **'민간 주인찾기'가 필요**하다는 것이 **정부의 일관된 입장**이며,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**산업은행**(대주주) **중심**으로 **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**할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박주현 서기관(☎ 044-203-43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